■ 일본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파문 / 해류 분석결과 보니…

# "오염수 200일만에 제주바다 도착"

## 제주연구원, 日정부 방류 강행 전 강력 대응 주문 "우리나라 연안 유입시 해양생태계·수산업 악영향"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125만t)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약 200일만에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제주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정부는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13일 발표한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 JRI 정책이슈브리프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미국→적도→아시아로 되돌아온 후 대마난류(아시아로 돌아올 경우 동해와 서해로 갈라지는 해류)로 인해 제주와 우리나라로 이동을 한다.

지난해 10월 독일 킬 대학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만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하는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를 내놨다. 일본의 후쿠시마대학과 가나자와대학도 유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이노마타 등이 보고한 논문에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약 5%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은 갑상선 암, 스트론튬-90은 골수암, 세슘-137은 신장과 방광에 축적해 암 등을 유발하며, 플로토늄은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등 위험한 물질이다. 이에 국제규범인 UN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하기 전에 제주도 차원의 단계별 대응방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단계(관심) : 현재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 및 자료공유는 물론 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방안 모색 필요 ▷ 2단계(주의) : 상황반 설치, 유관기관 협조, 대책반 구성, 방사성물질 감시 지원(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 사항 구체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산물에 대한 감시 강화 ▷ 3단계(경계) : 상황반·대책반 운영, 방사성오염물질 조사 지원, 선박 운항 통제여부 결정 및 수산물 채취 금지 ▷4단계(심각) : 상황반·대책반 운영 강화, 방사성물질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통제, 수산물 유통 통제이다.

그는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감시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해양수산부) 및 위탁기관(해양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수립 지원이 필요하고 제주 해양환경을 조사·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UN해양법협약 또는 런던협약 및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 소송 제기와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등 강력한 의지와 발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대로기자

##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절대 수용 불가"

### 도내 수산업계 규탄 성명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방침을 공식 밝힌 가운데 제주 수산업계가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어업인 수산인단체 대표 등은 13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규탄 및 철회 요구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제주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포함한 수산기관단체 모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지구촌 전체의 해양환경 보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해양생태계를 지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절대 강행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면 직접피해와 수산물 소비급감으로 수산업계는 궤멸적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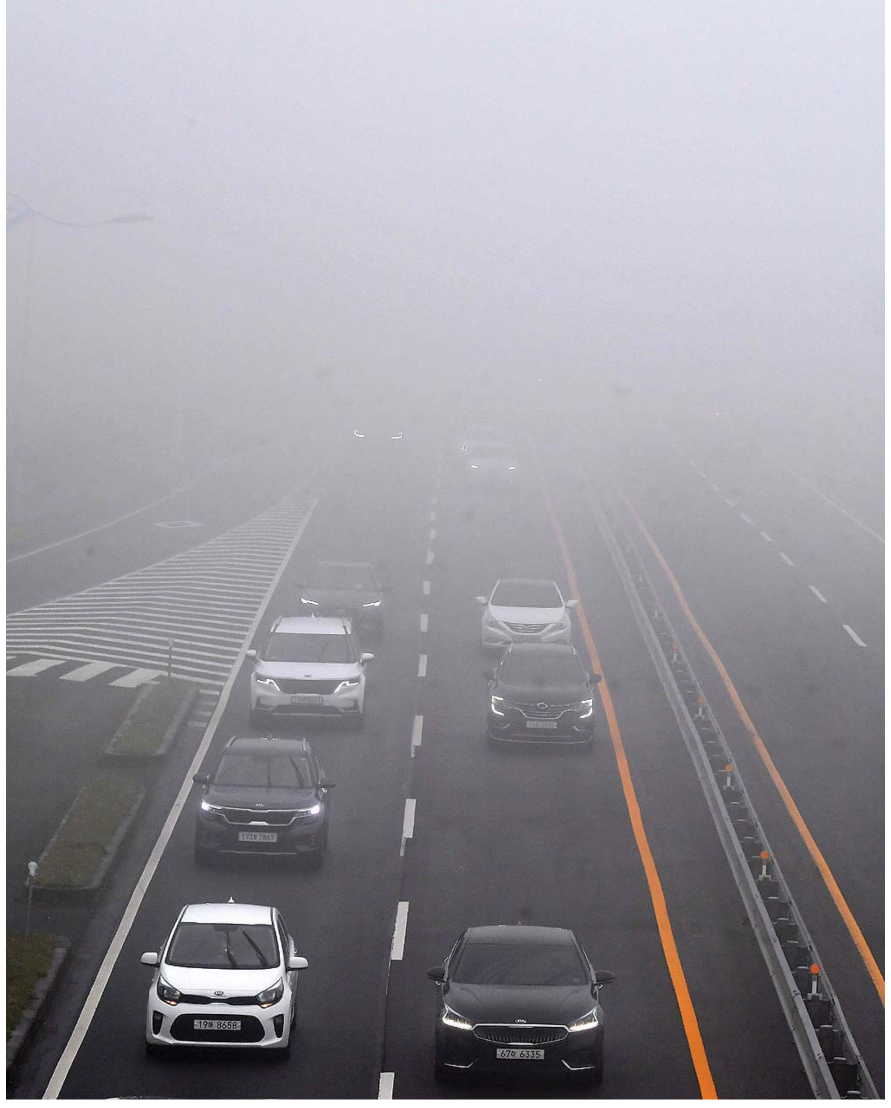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항만·어항 건설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부터 2주간 도내 항만과 어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 연약화에 따른 침하 사고 등 항만·어항 건설공사 현장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안전 요소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현재 시공 중인 제주항 어선물양장 축조공사 등 건설공사 현장 5곳이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항만·어항의 기존 시설물의 경우 긴급안전점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강다혜기자



**짙은 안개에 갇힌 평화로** 13일 오전 평화로 일대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강희만기자

## "오등봉·중부공원 전직공무원 투기 의혹"

### 참여환경연대 기자 회견

### 공무원들 "사전정보 얻을 위치에 있지도 않아" 반박

제주시가 추진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참여연대 교육문화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공무원 출신 A씨와 가족, 전직 공무원 D씨가 토지를 투기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 퇴직한 전직 고위공무원 A씨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은 2019년 3월 건입동 중부공원 내 1만752㎡를 모친인 B씨로부터 증여받았다. 같은해 9월 증여된 토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로 결정됐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7년 7월 업체 2곳을 포함해 모친 B씨 등 총 7명이 분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건설업체와 관련된 C씨는 한 업체와 함께 오등봉공원 내 토지를 2019년에 6억5000만원, 2020년에 15억원을 투입 매입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고령인 B씨가 차명으로 토지를 산 뒤 A씨에게 증여했을 가능성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업체 2곳은 페이퍼회사로, 명의만 B씨로 해 A씨에게 전달한 뇌물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고위공무원 출신 D씨가 친인척 명의로 지난 2007~2009년 3년간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토지 2578㎡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2017년 7월 모친이 매입한 것으로, 당시 본인은 공로연수 중이라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바로잡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참여연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투기 입장에서 이득을 볼 주체가 바로 매입을 하지 모친 이름으로 매입해 다시 증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내겠느냐"고 언급했다.

또한 C씨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땅을 산 친척도 없고, 도시계획파트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땅 산 사람도 없고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만약 자문 역할이었다면 아파트지구를 사라고 하지 공원지구를 사라고 하겠느냐. 모든 정황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84㎡ A타입 경쟁률 49대 1 기록

### 제주 3월 분양경기 지표 상승

제주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역대 최고가 민간아파트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택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분양가 논란 속에도 1순위 청약에서 두 자릿수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며 분양가격에 대한 거품 우려와 함께 주변 시세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제주지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실적은 90.0으로 전월(68.7) 대비 21.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HSSI 조사가 시작된 2017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충남(35.5)에 이어 경남(21.3)과 함께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제주 분양경기실사지수 전망치와 실적치 갭이 큰 것은 주택 공급환경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보니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은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 e편한 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1단지는 102가구 모집에 2062건이 신청해 20.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4㎡ A타입은 경쟁률이 49대1을 기록했다. 2단지도 102세대 모집에 663명이 접수해 6.5대1 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지난달 31일 청약이 이뤄진 연동 한일베라체 더 퍼스트는 7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091건이 신청해 평균 14.17대 1의 경쟁률로 모든 타입이 1순위 마감됐다. 문미숙기자